

“국가철도망 구축 총력 대응 나서야”

전북 6건 중 1건 반영... 민주당 “국토부 계획 중 신규사업 대부분 수도권 일색에 유감... 도-정치권 공조 시급”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28일 이명연 수석대변인의 논평에서 “국가철도망 구축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명연 수석대변인은 “이번에 전북도가 건의한 철도망이 구축되지 못한다면, 전북도의 주요 사업들은 동력을 잃게 될 것이고 우리의 희망인 새만금의 미래 역시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가치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과연 국정 가치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서 일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전북도당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

난 22일 공청회를 통해 향후 10년에 걸쳐 추진하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최상위 철도 계획인 이번 계획안에는 본사업으로 총 43개가 우선 선정됐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6월 중에는 최종안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본사업으로 선정된 철도사업은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철도망사업이 22건에 달하고, 경상권 8개, 충청권 6개, 강원 3개, 광주전남 2개 사업이 반영됐다.

전북도의 경우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전라선 고속화, ▲새만금~목

포 철도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 등 총 6건의 사업을 건의했지만 이 중 단 1건만 반영된 상태다.

그런데 반영된 ‘전라선 고속화’의 경우, 익산~전주~남원~구례~순천~여수를 잇는 전남과의 공동사업으로, 전북의 독자 사업이라 평가할 수 없다. 즉, 이번 정부의 구상안에서 전북도는 철저히 소외되고, 배제됐다 할 것이다.

이명연 수석대변인은 “이번 공청회 자료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 광역철도 확정사업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당분간 사업에서의 불균형이 지속될 것이라고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에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 중 신규사업 대부분이 수도권 일색인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 SOC사업을 준비해 온 전북도의 대응 역시 아쉬움이 남는다”며 “좀 더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 공격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정부 실행사업에 임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이번 계획안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우리 전북도에게 아직 두 달이라는 희망이 있다”면서 “전북도와 정치권의 공조가 어느 때 보다 시급하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역시 전북도와 함께 추가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모두가 한 뜻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은 28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서울특별시 가락시장 내 전북형 공익시장도매인 설립 및 운영 제언에 따른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매시장 사회적 역할 모색 시급”

나인권 도의원, ‘전북형 공익시장도매인’ 설립 제언 토론회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의원(김제2·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서울특별시 가락시장 내 전북형 공익시장도매인 설립 및 운영 제언에 따른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나 의원은 환영인사에서 “19·20대 국회에서 농안법이 직접소득정책이라는 이유 등으로 부결됐으나, 21대 국회에 연이어 발의된 것은 농민의 땅이 소득으로 보장받지 못해서”라며 “농민·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농산물 유통구조가 정립될 수 있도록 해안을 모아 달라”고 부탁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북형 공익시장도매인의 도입에 대해 긍정과 부정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문준태 서울시농수산물공사 팀장은 “경매 회사인 도매법인들의 낮은 수익성과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성을 올리고 있는데 가락시장의 거래제도와 거래방식만으로 운영된다면, 이해받은 농민이 아닌 도매법인만을 위한 사업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위태석 농촌진흥청 연구관은 “현행 경매제의 문제는 중도매인이 실질적으로 도매법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며 “대규모정산기구를 만들어 이를 해소하고, 정가·수익에 확대 등 현행 도매법인 중심의 유통체계 정비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북도는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사업을 실시해 농가에 적절한 가격을 보장하는 성공 사례로 정착했다”며 “가락시장 내 공익시장도매인을 별도로 개설함으로써 적정가격을 보장해 주는 제도 도입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해근 남원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보는 “서울강서시장도매인도매인이 실시되고 있지만, 실제시장의 가격 결정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경매·입찰, 정가·수수매매를 모두 자유롭게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인권 의원은 “농산물이 제 값을 받는 유통시스템과 급변하는 유통시장의 역동적인 대응을 위해 도매시장의 사회적 역할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참석한 분들의 지혜를 모아 농업인들의 소득이 보장되도록 제도적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형 공익시장도매인은 가락시장 내 전북이 직접 농산물 유통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시장도매인 성격의 비영리법인체를 만들어 농산물이 기준가격에 못 미치면, 전북도가 가격을 일부 보전해주고, 수익이 나면 기금으로 적립해 가격안정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유호상 기자

민주 이원택 의원, 농축산물

판로지원 ‘농협법’ 개정안 발의

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 보전과 신선한 농축산물의 공급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은 농축산물의 판로지원을 위한 ‘농협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농협조합 등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특례조항을 통해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물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해당 특례조항을 통해 농협 조합 등은 학교급식에 김치 등의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으나,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이 2022년에 만료될 예정이어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관련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의 농산물 공급 및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 “우리 땅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공공기관 등에 납품해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민주 윤준병 의원, 내달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도개선 토론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5월 4일 오후 2시 서울 컨벤션 호텔 센트럴파크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환경부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와 불법 개·변조 제품의 유통 등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 업계가 함께 참여해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준병 의원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사용 확산으로 공공수역의 수질악화와 함께 환경오염 개선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이 우려된다”라며,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음=김대희 기자



“노을대교,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 정은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 원주)이 2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간담회를 갖고 “노을대교가 6월 확정되는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노을대교는 고창군 해리면 왕촌리와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를 연결할 다리로 전체 7.48km 길이다. 완공 땀 62.5km를 우회해야 했던 이동거리가 7km로 줄고 통행시간도 5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된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도내 개별주택 26만1408호 공시가격 결정·공시

내달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전북도가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개별주택 26만1408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29일 시·군별로 일제히 결정·공시한다.

이와 관련한 이의신청은 오는 5월 28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도는 올해 도내 14개 시·군의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28만2326호를 조사해 국·공유지 등을 제외한 26만,408호의 공시가격을 일제히 결정·공시했다.

이날, 도와 각 시·군이 발표한 개별주택가격 평균 변동률은 전년 대비 3.57%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6.10%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시·군별로 부안군이 6.81%로 전년 대비 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군산시가 전년 대비 1.24%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날 전국 평균 상승률 6.10%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시·군별로 부안군이 6.81%로 전년 대비 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군산시가 전년 대비 1.24%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날 전국 평균 상승률 6.10%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시·군별로 부안군이 6.81%로 전년 대비 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군산시가 전년 대비 1.24%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군산시는 그동안 높게 산정돼 있던 공시가격과 경기침체에 따른 실거래 가격하락 등이 반영돼 도내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도내 단독주택 중 최고가는 한옥마을이 있는 전주시 풍남동의 한 주택으로 17억8,500만 원의 공시가격을 기록했으며, 최저가는 김제시 봉남면 소재 주택으로 74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도내 개별주택 가격분포 현황은 96.4%인 25만2,094호가 3억원 이하의 가격대에 분포했다.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2.9%인 7,667호, 6억원 초과는 1,647호로 도내 개별주택의 대부분인 99.3%가 6억원 이하의 가격대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세율 인하를 적용하기로 해, 도내 개별주택 소유자의 99.3%인 25만9,761호가 재산세 감정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각 시·군은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함께, 오는 5월 28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유호상 기자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나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및 시·군의 민원실과 읍·면·동사무소에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이의신청은 공동주택의 경우, 시·군을 통해 한국부동산원 전국지사에 전송하거나, 민원인이 직접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해당 시·군 재무부서나 민원과에 연락하면 된다.

각 시·군에서는 이의 신청된 주택에 대한 검토를 거쳐 6월 25일 최종 조정 공시를 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시·군에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해 결정된다.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각 시·군 주택 특성을 비교해 가격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주택소유자의 열람과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렇게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평가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유호상 기자

도의회 교육위, 민주시민교육 현장 방문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가 민주시민교육 현장을 직접 방문해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28일 4·19혁명의 불씨가 되었던 김주열 열사의 생가와 그의 모교인 금지동초교, 금지중학교, 추모공원 등을 방문했다.

김희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전주6)은 이날 “학생들의 민주시민교육 프

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면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정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익산2)은 “코로나19로 각종 학교의 현장교육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이끈 지역의 인물을 잊지 않고 그릴 수 있도록 경험하고 확인하기 위해 이번 현장 방문을 적극 추진

했다”고 강조했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지역의 역사적 인물을 책으로만 접하는 것보다 직접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체험하는 것은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발전을 위해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개선해 나가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 코로나19 조기 종식돼야

전북도, 민생경제원탁회의 비대면으로 개최 강화된 기본 방역수칙 준수 등 감염병 극복 다짐

전북도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도내 주요 경제 관련 기관·단체장이 참여하는 ‘민생경제원탁회의’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전북도를 비롯해 도내 30개 경제 관련 기관·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코로나19 극복 다짐 행사, 최근 전북지역 경제동향 공유, 각 기관 주요사업 홍보, 기관 간 협력사항 요청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 앞서 참석한 기관·단체는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코로나19 조기 종식돼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방역수칙 준수에 솔선하고자 ‘코로나19 극복 다짐행사’를 가졌다.

다짐문은 전주상공회의소 이승복 사무처장이 도내 경제 관련 기관·단체를 대표해 선포했다.

다짐문에는 ▲코로나19로 강화된 기본 방역수칙 준수 철저, ▲불필요한 출장 및 나들이 자제, ▲이상 증상 발생 시 선제적 검사 실시, ▲백신접종 적극 참여, ▲코로나19 극복 의지 범도민 확산 노력 등 코로나19 예방 실천에 대한 다섯 가지 내용이 담겼다.

이어, 이재량 한국은행 전북본부장이

최근 전북지역의 경제 동향에 대해 코로나19 등 여파로 산업생산, 소비·투자는 감소한 편이나, 다행히 수출과 고용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날 도내 기관·단체의 공동 협력사업에 대한 공유의 시간도 가졌다.

전북도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사업재기 지원, 소상공인 비대면 경영 전환 지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외국인 근로자 체류 및 취업 활동기간 1년 연장 방안,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소상공인 위기 대응 및 자생력 강화지원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의 선제적 위기 극복 및 성장 지원 방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경제회복 대책본부 참여(익산상공회의소), 코로나19 경영여파로 납세자 세정 지원(전주세무서),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관계 행정지원 강화(전주세관)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과 비대면시대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력사업이 주된 내용이 됐다.

/유호상 기자